

과학기술로 國難 극복을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외환난에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몰린 이 난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환관리의 직무를 유기한 당국자나 외화를 흥청망청 쓰고 다닌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연구개발비가 대만의 2배가 넘는데도 우리는 2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고 대만은 1백3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으며 미국에 등록된 특허수도 대만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통계의 의미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河斗鳳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해였다. 환율이 연초의 2배가 넘는 1달러당 2천원까지도 치솟았고 주가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였으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지어 부도를 내고 쓰러져 갔다. 심각한 외환난에 국가부도의 위기에까지 몰린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세계 각국에 빚으러 다니기에 눈코 뜰사이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또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분노와 걱정에 일손이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다. OECD 가

입이다, G-7 진입이다 하던 것이 엇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빚 얻어서 빚갚는 데 급급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산업경쟁, 과학기술력에 달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김대중정부의 출현을 이제 눈 앞에 두고 있다. 새 정권에 거는 기대는 과거 어느 정권에 우리가 걸었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간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월 말에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격랑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게 된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를 직접 이끌고 나갈 정부요인 모두와 또 국민 전부가 새로운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 과학기술인도 이 국난 극복의 대열에 빠질 수 없을 뿐더러 제일선에서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화보유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이 책임문제로 공방이 치열했었고 국회 청문회 개최론까지 나왔었다. 일부에서 억측하는대로 정부의 외환관리에 있어서 은폐, 왜곡 또는 직무유기 등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론으로 말한다면 오늘날의 경제파탄의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고급 모피류, 고급 양주, 고급 가구 등 온갖 사치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어학 연수요, 관광이요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나가 물쓰듯이 뿌리고 온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 소득은 겨우 만달러에 소비는 수만달러 소득수준이어서 외국인이 오히려 우리의 사치성 소비 풍조를 걱정한 지경으로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또 거드름을 피웠었다. 여기에 무역적자마저 겹쳐 오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초래하는데 한 몫을 한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현금의 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일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책임이 더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산업 국제경쟁력은 1차

적으로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이 그만큼 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모자란 것은 바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그나마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쯤부터였으니 이제 고작 30여년이라는 연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동안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나 투자는 결코 충분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기업체는 값싼 중고 기술의 도입과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로 손쉽게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 또 그럴만한 여력도 없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이러한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현실이 인식되어 과학기술개발에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또 산학협동의 강조와 함께 그를 위한 체제도 갖춰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역량을 쌓아올린 것은 우리들 과학기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임에 틀림없다.

열악한 환경은 극복했지만 ...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만큼이나마 쌓아올린 것은 우리들 과학기술인의

각고의 노력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수준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몫은 다했다고 이제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아직 저가품의 대명사를 벗지 못하고 있고, 또 그나마의 산업경쟁력도 연구개발에 의한 것보다는 생산현장에서의 기술개량 및 품질관리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향간의 평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더 한층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고비용·저효율의 병폐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예외일까? 쥐꼬리만한 연구비, 모자라고 노후된 장비, 만사가 비능률 투성이인 연구지원체제, 비싼 인건비, 이 모두가 과학기술인들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연구시기를 놓치게 하는 요인들이어서 과학기술계의 고비용·저효율의 원흉이다. 이러한 연구 외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수나 연구개발비가 이웃 대만의 2배가 넘는데도 1996년도에 우리는 2백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낸 데 비해 대만은 1백3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냈고, 미국에 등록된 특허수도 우리나라는 대만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통계들은 우리가 겸허히 웃음을 여미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이 국난에 대해 정치나 행정 또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이 있다면 물론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과학기술인들 자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자성론(自省論)으로 한층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과학기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제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성은 한층 더 자신에게 가혹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험실 불 끄지 않는 연구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불과 30여년만에 완전 황무지에서 그래도 오늘날의 이만한 과학기술력을 배양해 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아직은 국제경쟁력에서 선진국들에 뒤지기는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고속 발전을 이룩하였다. 실제로 과학기술 논문발표 실적을 SCI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에 세계 33위였던 것이 91년에는 32위, 92년에는 29위 등으로 매년 상승하여 95년에는 23위 그리고 96년에는 19위까지 올랐다. 아직 인도, 중국, 대만에도 뒤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로 대견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을 갖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된다. 이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층 더 분발하여 실험실의 불을 밤 늦게까지 밝힌다면 오늘날의 이 국난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힘으로 무난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①7